

## 서울형 대안학교, '최소한의 기준' 제시하고 지정 후 교육 질 담보하는 다각적 지원 필요

### 서울시, 올 초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계획 발표, 지정기준·운영전략 필요

서울시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나오는 청소년 수가 매해 1만여 명에 이르고, 2017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8만여 명(윤철경 외, 2019)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12년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이 학습과 진로개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비인가 대안학교에 교사 인건비, 수업료,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초 '2019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계획'에서 그간 수행한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보다 한 차원 발전한 '서울형 대안학교'를 지정하여 지원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서울형 대안학교를 지정하려면 '서울형 대안학교'가 무엇이며, 어떤 방향과 목표를 가질 것인지를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목표에 부합하는 서울형 대안학교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

###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 71곳 운영 확인... 운영방식별로 현황 차이 커

서울시내 운영 중인 비인가 대안학교 조사 결과, 현재 파악된 비인가 대안학교는 71개소이고, 이 중 59개 기관이 현황 조사에 참여하였다. 비인가 대안학교는 운영방식에 따라 전일제형과 공간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일제형은 일반학교와 유사하게 전일제 학교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대안적 진로 모색이나 공교육 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이유로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생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공간형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거점으로 정보제공과 다양한 학습, 체험, 진로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등 사회적으로 위기사항에 처한

청소년의 이용률이 높아 교육 공간이자 돌봄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 유형의 차이는 이용자 수, 상근교사 수, 시설 현황, 수업료 등에서도 큰 차이로 이어졌다. 전일제형은 공간형보다 학생 수가 0.6배가량 적고, 상근교사 수는 2배가량 많았다. 공간형은 수업료가 무료인 곳이 80% 이상인 반면, 전일제형은 85.7%가 수업료를 받고 있었고 수업료 또한 38만 원으로 공간형보다 2배 이상 비쌌다.

[표 1]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 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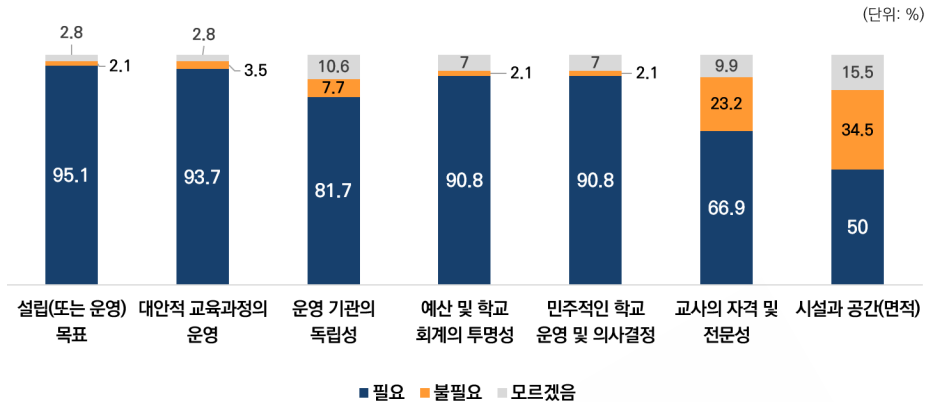
구분		전일제형	공간형
조사기관 수		42개소	17개소
운영방식		일반학교와 유사한 전일제 방식	공간을 기반으로 프로그램 중심 운영
이용자 수 평균		28.8명	44.8명
상근교사 수 평균		5.8명	2.9명
수업료	유료 기관 수	36개소(85.7%)	4개소(23.5%)
	평균액	38만 원	17만 원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기준, 73% “필요” … 97% “현 상태 고려한 기준 마련”

비인가 대안학교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울형 대안학교 도입과 지정 기준에 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서울형 대안학교 정책 도입 시 지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73.2%)이 불필요하다는 의견(6.3%)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정 기준의 준거로는 ‘비인가 대안학교의 현재 상태를 고려한 기준 마련’(96.5%)과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과 학습 지원을 위한 충분한 기준 마련’(88.7%)에 높은 지지를 표명하였다. ‘대안학교 설립·인가 기준 및 각종 학교의 설립·인가 기준 등을 고려한 기준 마련’(54.9%)에는 절반 정도만 찬성의 입장을 표시하였다. 이는 비인가 대안학교 관계자가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정책으로 서울시의 적극적 지원에 지지 입장을 나타낸 반면, 인가형 대안학교에 준하는 기준은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정 기준 항목별로 ‘설립(또는 운영) 목표’(95.1%), ‘대안적 교육과정 운영’(93.7%), ‘민주적인 학교 운영과 의사결정’(90.8%), ‘예산·회계의 투명성’(90.8%)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비해 ‘교사의 자격과 전문성’(66.9%), ‘시설과 공간’(50.0%)은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교사 자격 기준과 시설 기준이

서울형 대안학교 진입장벽을 높이는 기제로 작용하거나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을 우려한 결과로 추측된다. 간담회에서는 서울형 대안학교는 최소한의 교육의 질과 공간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되, 다만 그 기준을 각 기관이 충족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였다.



[그림 1]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항목별 필요성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교육기회·무상 제공 등 5가지 원칙으로 추진해야

서울형 대안학교의 정책 목표를 '학교 밖 청소년의 균등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양질의 교육 제공'으로 설정하였다. 즉 서울시는 학교교육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공공교육에 준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섯 가지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공공지원을 확대해 대안교육의 공공성 강화, 둘째, 서울형 대안학교의 책무성 강화, 셋째, 교사·교육의 전문성 향상, 넷째, 교육의 다양성 강화, 다섯째, 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운영 절차 확보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성장을 지원하려면 최소한의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향후 서울형 대안학교를 지정·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5가지 원칙을 설정하였다. 제1원칙은 '교육기회 제공의 원칙'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에서 교육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 외 진로·직업 탐색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2원칙 '무상 제공의 원칙'에 따르면, 의무교육단계의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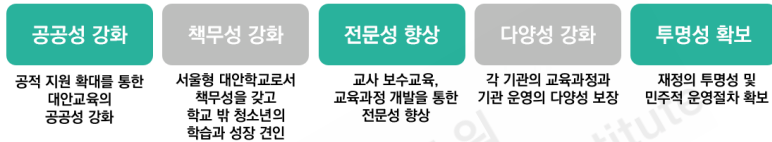
밖 청소년에게는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제3원칙은 ‘보충지원의 원칙’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최소 환경 마련을 지원하고, 교육활동비·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학교 밖 청소년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제4원칙 ‘자율성 및 독립성의 원칙’은 비인가 대안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과 운영을 보장하되 운영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제5원칙은 공공성의 원칙으로, 교육의 목적인 공익을 추구하며 책무성을 담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 목 표

### 학교 밖 청소년의 균등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양질의 교육 제공

- 학교교육 중단 여부와 관계 없이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받을 기회 제공
-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교육에 준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 제공

## 정책방향



[그림 2] 서울형 대안학교 목표와 정책 방향

## 비인가 대안학교 운영 실태 고려해 학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준 제시

서울형 대안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과 성장, 진로 탐색을 추구하는 자율적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인가 대안학교로, 서울시 지정 기준을 구비한 대안교육기관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정 기준 항목은 교육활동을 위한 핵심 요소인 ‘교사 인력(교사 자격)’, ‘교육공간’, ‘교육과정’을 기본적인 필수 기준 항목으로 설정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독립성과 민주성’을 부가 기준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항목별 지정 기준의 수준을 높이면 해당하는 기관이 적기 때문에 최저기준을 설정하여 기존 비인가 대안학교가 서울형 대안학교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교육공간의 안정성과 교육의 질 보장 등 학교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교사 자격은 교원자격 외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등 유관 국가교육자 격증 소지자로 설정하였다. 현재 교사 인력은 비인가 대안학교에서의 교육경력을 인정하고, 신규 인력에게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공간은 학교 밖 청소년도 쾌적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인당 최소 면적 기

준을 설정하였다. 인가형 대안학교 기준을 적용하여 최소 건물 면적 기준을 1인당 초등 3.3㎡와 중등 7㎡로 세웠다. 이에 서울시는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최소 면적 이상의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은 자율적 교육과정을 존중하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내용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교육내용은 사회와 관련 내용(시민의식, 지역사회 이해, 인권, 평등, 공동체, 정의 등)으로 구성하고, 최소 운영 시간은 향후 지침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부가 기준으로 회계의 투명성과 교육의 독립성, 운영의 민주성 확보를 제시하였다.

### 대안학교 지정 후 ‘교육 질 담보하게’ 주기적 컨설팅 등 다각도 지원 필요

서울시는 지정 이후 학교 밖 청소년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관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서울형 대안학교 지원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 예산 지원은 인력과 관련된 인건비, 공간·시설과 관련된 임차비, 교육과정 관련 프로그램 운영비와 수업료 지원을 포함한다. 둘째,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의 최저 기준을 비인가 대안학교가 충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은 선발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탈락 기관 또한 최저선을 맞추도록 평가 결과 피드백을 활용하게 해야 한다. 셋째, 주기적인 컨설팅으로 서울형 대안학교의 질을 관리·유지해야 한다. 컨설팅단은 대안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고, 2년마다 컨설팅을 시행해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서울시는 서울형 대안학교 교사 대상 보수교육 계획을 마련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정 기준의 하나로 교사의 자격을 두었지만, 이는 최소한의 요건이기 때문에 급변하는 교육 트렌드와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역량에 맞춘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주기적으로 교사의 재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담당할 전담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

#### 서울형 대안학교 지원 매뉴얼 마련

- 지정된 기관에 대해 예산 지원을 위한 매뉴얼 마련
- 인건비, 임차비, 운영비, 수업료 지원 관련 세부 지침 마련

#### 지정 평가 결과 피드백 제공

- 지정결과 피드백을 통해 탈락기관 또한 최저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 주기적 컨설팅 실시

- 대안교육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전문가로 컨설팅단을 구성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후 2년마다 실시

#### 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

- 교육 트렌드와 사회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사 재교육을 실시하여 교사 전문성 강화

#### 서울형 대안학교 지원·관리 전담조직 마련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이후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담당할 전담 조직 필요
-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위임

[그림 3] 서울형 대안학교 운영관리 전략

